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77호
2020.10.12

정책동향

- | 노후 인프라, 관리 역량진단 플랫폼 구축 필요
- | 일본의 건설 원가관리 자격제도

산업정보

- | 국내 건설산업 산재 감소율 OECD 국가 평균 상회
- | 미래 건설산업의 혁신 동인과 형태

건설논단

- |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정책,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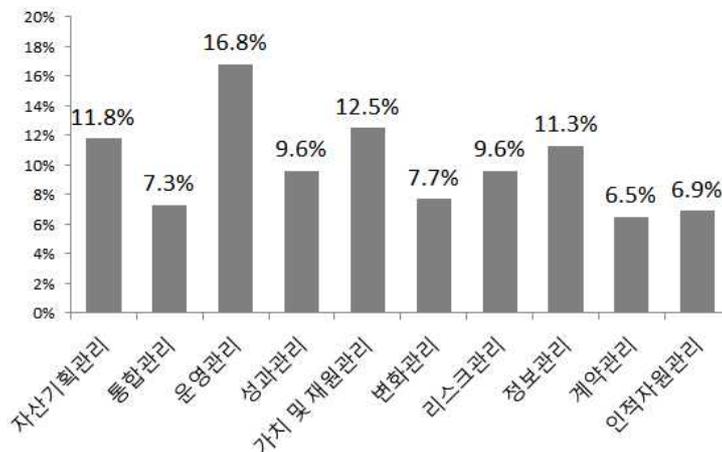
노후 인프라, 관리 역량진단 플랫폼 구축 필요

- 기반시설관리 체계 구축 및 선제적 노후화 대응과 안전성 확보 지원 -

■ 건산연, 기반시설관리 역량진단 플랫폼 구축으로 공공·민간 운영기관 맞춤형 지원¹⁾

- 2020년 5월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15종 기반시설의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
 -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과 관리 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를 위한 종합적 체계 점검 및 관리 주체의 역량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기반시설관리법」, 「시설물안전법」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종합적 성능개선에 필요한 관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 이는 사용자인 국민의 안전성 확보와 공공 재원의 효율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과 관리를 위한 성능개선 중심의 제도 및 기준은 수립되었음. 하지만 지속가능성과 관리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10대 핵심관리 영역의 포괄적 체계 구축보다 성능 점검·평가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 또한, 공공 운영기관의 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원 조달 및 운용에 대한 상세 기준 수립이 필요하고, 예산 조달에 대한 모호한 관련 법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지속가능한 노후 인프라의 핵심관리 영역 가중치(weights)



1) 본 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공공 기반시설관리 역량진단 모델 구축 방안」 연구 결과 일부를 재구성함.

■ 노후 인프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관리 역량 제고와 체계 구축부터 시작

-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시설이 약 36.8%(2018년 12월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와 산업 차원의 노력이 절실함.
- 국내 관련 제도 및 국제 표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향후 해외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운영 주체의 관리 영역별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표 1> 참조).

<표 1> 10대 관리 영역의 세부 진단 요소

핵심관리 영역	진단 요소 상세 설명
자산기획관리	목표 및 목적 정립 수준, 인프라시설 범위 및 분류체계 정립, 운영자와 사용자 요건 정립, 미래 수요 분석 및 예측, 시설자산관리 전략(현재 상태, 미래 가치 등 기준 포함), 정책 및 전략 성과 정의, 실행 결과 측정 및 피드백 체계
통합관리	시설관리 기능 간 프로세스 정립, 시설관리 업무 수행 체계 통합,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시설자산관리계획(AMP) 수립, AMP 기반 수행 결과 모니터링 기능 확보, 정보 측정 및 피드백 체계 정립
운영관리	점검/유지관리/성능평가 세부 기준, AMP 이행을 위한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운영기관의 규정/지침 정립, 구조적 안전성/내구성/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및 수준 정의, 미래 성능 예측 방법론, 실행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 측정 체계 구축
성과관리	성과관리 기준 및 계획 수립, 시설물 성과와 성과 측정 기준 수립, 내외부 요건 변화에 따른 기준 변경관리 체계 구축, 운영기관의 재무적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성과 기반 지속적인 관리 업무 수행 절차 수립
가치 및 자원관리	시설 가치 평가 및 자원관리 기준, 단·중장기 자원 조달 계획, 시설 현황 및 상태 분석 방법론, 서비스 수준(LOS) 기준, 생애주기 비용 산출과 가치 평가 및 예측, 자원 투자 우선순위 결정 기준, 예산 계획 대비 실적 분석 및 예산 확보 계획, 가치 및 자원관리 결과 측정 체계
변화관리	관리 활동 영향/변화 요소 및 관리 기준 마련, 조직 기반 변화관리 역할 수립, 변화 요소 영향 범위와 수준 분석, 업무 간 이해 상충 식별 및 관리 기준, 변화 이력과 진행 상황 추적, 시설 생애주기 관점 데이터 측정 및 의사결정 체계
리스크관리	구조물 및 설비 리스크 분류체계 등록부 작성 기준 문서화, 리스크 식별/분석/대응/모니터링 계획서, 사고/비상상황 등 대응 프로세스 정립, 리스크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 체계, 리스크 통제/대응/모니터링/성과 추적 기능
정보관리	시설 정보 생애주기관리 및 표준 분류체계 정립, 데이터/정보 수집/업데이트/저장 계획, 시스템 연계 정보관리계획, 문서자료 관리계획 수립, 정보 보안 지침, 주요 의사결정 및 계획 수립, 개선사항 도출 및 결과 측정/지식화 체계
계약관리	관계자 역할 및 계약/구매 운영 절차/지침, 공급자 평가 등 계약관리 계획, 입찰 대상자 선정/인내서 작성/평가 등 입찰 준비와 계약 체결 절차, 계약 결과 인수/대가 지불, 절차/지침에 따라 계약 변경 및 영향도와 중요도 평가/관리, 계약 목표 정기 점검, 공급자 수행 업무 평가 및 부적격 업체 관리, 계약관리 업무 수행 결과 측정 및 후속 사업 활용 지침
인적자원관리	시설관리 업무 R&R/직무 내용/역량/핵심 평가지표 등 표준 직무기술서, 인적자원관리(배치 기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포함) 계획 수립, 수행 역할 및 책임 조정 기능, 조직 효과 평가 및 교육/훈련 후 역량 재평가, 인력(조직) 성과 측정

■ 종합적 프로세스 기반의 인프라시설 관리는 자원 효율화와 안정성 확보에 효과적

- 노후 인프라의 디지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기존의 관리 체계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세스 기반 체계로 구축하는 것임. 노후 인프라시설 관리 역량진단 및 보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성 확보와 공공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일환인 사회기반시설의 디지털화는 지식정보 및 정보통신기술보다 시설 물에 대한 근원적 기술력 확보와 핵심 데이터 및 정보 축적이 우선되어야 함.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일본의 건설 원가관리 자격제도

- 공공 정보시스템상 전문 기술자로 관리, 공공 용역사업 입찰시 가점 부여 -

■ 일본 건설 원가관리 자격제도,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건축적산협회가 관리²⁾

- 1979년 공인 민간자격으로 도입된 건축적산사는 1990년부터 국토교통성 인증제도로 편입되었으나, 2001년 행정개혁에 따라 다시 민간 자격제도로 전환되었음.
 - 당초 건축적산사 자격제도를 도입한 일본 건축적산협회(BSIJ)가 2001년부터 운영을 맡음.
 - 국토교통성은 '건축 적산에 관한 지식 및 기술심사 증명사업 인정 규칙' 등 자격 인정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자격명이 '건축적산자격자'로 변경되기도 하였음.

■ 역량 수준별 자격 마련, 공공 발주기관 용역사업 입찰시 가점 대상으로 인정

- 2006년 일본 건축적산협회는 원가관리 업무 영역과 지식 범위를 건설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한 상위 자격인 건축코스트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음.
 - 원가관리 역량의 향상과 원가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대응하여 건축코스트관리사가 기존 건축적산사의 상위 자격으로 도입됨.
 - 기존 자격보다 확장된 기획·구상에서 유지관리·폐기까지 건설 생애주기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발주 및 조달, 시공기술, VE, FM, PM·CM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함.
 - 건축코스트관리사 응시 자격은 건축적산사 취득 이후 1회 이상 갱신하였거나 5년 이상의 원가관리 경력을 갖춘 자, 그리고 1급 건축사 자격 보유자임.
- 또한, 2009년에는 대학, 전문고등학교 및 직업학교의 건설 원가관리 기초교육 제공을 위해 건설 원가관리 초급 자격에 해당하는 건축적산사보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일본 건축적산협회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학교의 원가관리 관련 교과목 수강 후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으며, 추후 상위 자격제도인 건축적산사의 1차 시험이 면제됨.
 - 건축적산사보 도입으로 일본 건축적산협회의 건설 원가관리 자격제도는 건축적산사보, 건축적산사, 건축코스트관리사의 3개 등급의 자격제도를 갖추.

2) 일본 건축적산협회(The Building Surveyor's Institute of Japan, BSIJ) 홈페이지에 게재된 건설 원가관리 자격제도 소개 페이지 (<http://www.bsjj.or.jp/education/license/index.html>)의 주요 내용을 참조하였음.

<표 1> 일본 건축적산협회의 건설 원가관리 관련 자격제도

자격명	건축적산사보 (초급)	건축적산사 (중급)	건축코스트관리사 (고급)
도입 연도	2009년	1979년	2006년
정의	건축 생산과정의 공사비 산정 및 부대 업무 관련 기초적 지식 보유자	건축 생산과정의 공사비 산정 및 부대 업무 관련 고도한 전문지식 및 기술 보유자	기획구상부터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 생애주기 전반에 관한 원가관리 업무의 고도한 전문 지식 및 기술 보유자
요구 지식	생산 프로세스 개요 공사발주계획 개요 설계도서 구성, 공사비 구성 적산업무실무 개요 LCC, VE 개요	생산 프로세스, 공사발주계획 설계도서 구성, 공사비 구성 적산업무 내용, 수량적산기본 표준내역서식, 주요 시장가격 데이터 분석 및 적산체크 시공기술, LCC, VE 개요 친환경 개요	건축적산사 요구 지식 원가정보수집 및 분석, 광범위한 시장 단가 발주전략, 조달전략, 실현 가능성 개선기법, 시 공기술, 공기 정산, 건축 관련 법규, IT LCC, VE, FM, PM, CM, 친환경 등
응시 자격	협회 등록 학교의 건축 적산 교과목 수강자	-	건축적산사 자격 취득 후 1회 이상 갱신한 자 5년 이상의 건축 관련 실무경력 1급 건축사 자격 보유자

- 국토교통성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사업 발주시 건설 원가관리 자격 취득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자격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활동기반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건축적산사는 국토교통성의 측량 및 건설용역 입찰 참가자격 심사시 가점 대상이 되며, 건축코스트관리사는 지자체의 설계용역, 원가관리 용역 제안 평가시 점수를 부여받음.
 - 오키나와현의 경우 건설공사, 측량 및 건설용역 등 입찰 참가 자격 심사에서 건축적산사와 건축코스트관리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건축적산사와 건축코스트관리사 취득자는 공공건축설계자 정보시스템³⁾상의 기술자 정보 지정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음.

■ 건설 원가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활성화 및 활동 기반 정립이 필요

- 우리나라의 건설 전문 원가관리 자격인 건설원가관리사 등 민간자격은 취득자의 역할 및 활동 범위에 대한 정립이 미흡함. 따라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공인 민간자격인 원가분석사에 한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지방계약법」상 계약심의위원회 등 활동 범위가 정의되어 있음.
 - 건설에 특화된 원가관리 전문인력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건설 전문 원가관리 자격자의 활동 영역을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산업 차원의 원가관리 역량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3) 公共建築設計者情報システム (Public Building Designers Information System).

국내 건설산업 사망사고 감소율 OECD 평균 상회

- 경제·고용·안전 측면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 -

■ 국가별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의 한계⁴⁾

- 국가별 산재 사망사고 통계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와 유럽연합 통계(Eurostat)가 대표적임.
 - 이 두 국제기구는 사고사망십만인율⁵⁾ 등의 자료를 연도별·산업별로 제공함. 국내는 통계청에서 국가별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를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통계청 자료를 포함한 국외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사고사망십만인율 자료는 국가별로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 비교에 한계가 있음.
 - 사고사망십만인율 산정방법의 차이는 분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 차이에서 기인함.
 - 근로자 수에는 크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수, 보험가입 근로자 수, 근로시간 등이 국가별로 적용되며, 국내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적용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건설산업 GDP, 근로자 수, 근로자 10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⁶⁾를 비교하고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을 분석하였음.

■ OECD 국가별 건설산업 주요 통계 분석 결과

- (GDP) 2017년 국내 건설산업의 GDP는 약 895억 달러로 36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았음. 2010년 대비 GDP는 70.6% 증가하여 회원국 평균(14.9%)보다 약 4.7배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건설산업 GDP는 미국(7,797억 달러), 일본(2,775억 달러), 독일(1,556억 달러) 순임.
- (근로자 수) 2017년 국내 건설산업의 근로자 수는 약 196만명으로 36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많았음. 2010년 대비 근로자 수가 12.4% 증가하여 36개국 평균(6.3%)보다 약 2배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건설산업 근로자 수는 미국(1,121만명), 일본(498만명), 멕시코(427만명) 순임.

4) 본 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OECD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5) 사고사망십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근로자 10만명

6) 본 고에서 비교한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각국의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OECD에서 집계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를 적용하여, 분모의 산정방법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음.

-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2017년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5.45로 OECD 35개⁷⁾ 회원국(평균 8.29) 중 가장 높았음. 2010년 대비 감소율은 14.8%로 35개국 건설산업 평균 감소율인 11.4%보다 3.4%p 높았음.
-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한국(25.45), 터키(25.01, 2016년 기준), 캐나다(21.77) 순임.

■ OECD 경제 10대 회원국 건설산업 주요 통계 증감률로 본 국내 건설산업

- 국내 건설산업은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중 2010년 대비 2017년 GDP가 70.6% 증가하여 1위, 근로자 수가 12.4% 증가하여 4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14.8% 감소하여 4위를 기록함.
- OECD 경제 10대 회원국 건설산업 중 3가지 지표의 증감률이 긍정적(GDP 증가, 근로자 수 증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감소)으로 변화한 국가는 독일, 한국, 호주밖에 없으며, 3가지 지표의 증감률이 모두 평균 이상으로 개선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 국내 건설산업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긴 하나, 경제·고용·안전 측면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표 1> OECD 경제 10대 회원국 건설산업 주요 통계 비교

국가	GDP (백만 US 달러)		근로자 (천명)		사고사망자 수/ 근로자 10만명(A)		2010년 대비 증감률(%)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GDP	근로자	A
미국	779,727.3	1	11,214	1	9.03	3	△48.8	△16.7	△8.2
일본	277,592.7	2	4,980	2	6.49	4	△1.6	▽1.2	▽10.3
독일	155,621.5	3	2,837	3	3.14	8	△17.5	△12.1	▽6.6
영국	146,479.3	4	2,336	4	2.31	10	△17.6	△5.4	△2.5
프랑스	129,760.8	5	1,740	6	6.03	7	▽9.5	▽8.4	△1.5
이탈리아	74,655.0	9	1,416	7	6.29	6	▽30.9	▽25.0	▽35.1
캐나다	108,642.4	6	997	10	21.77	2	▽3.1	△20.3	▽22.2
한국	89,520.9	8	1,988	5	25.45	1	△70.6	△12.4	▽14.8
호주	108,577.2	7	1,138	8	2.64	9	△12.8	△13.9	▽40.1
스페인	71,381.2	10	1,128	9	6.47	5	▽38.5	▽31.7	△6.8
평균					8.96	-	△15.4	△4.7	▽14.8

주 :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전체 산업 통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최수영(연구위원·sooyoung.choe@cerik.re.kr)

7) 아이슬란드는 산재 사망자 수를 제공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미래 건설산업의 혁신 동인과 형태

- 미래 건설산업, 프로젝트(project) 기반에서 상품(product) 기반으로 전환 -

■ 건설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인(drivers)⁸⁾

- 낮은 생산성으로 고통받는 고비용·저효율 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설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다양한 동인이 존재함.
- 전환 촉진 동인은 △ 고객 요구(customer demand), △ 투입 요소와 건설기술(construction inputs and characteristics), △ 시장 규칙과 제도(market rules and regulations), △ 산업화(industrialization), △ 새로운 자재(new materials) 상품과 프로세스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products and processes), △ 새로운 진출자(new entrants)로 구분할 수 있음.
 - 고객 요구 측면에서는 부족한 공공 예산에 따른 공사비 압력의 지속, 적응형 구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높아지는 발주자와 이용자의 요구 수준, 사업의 복잡성 증가, 총 보유 비용(total cost of ownership)에 관한 관심 증가, 단순화 및 디지털 상호작용 요구 증가 등이 포함됨.
 - 투입 요소와 건설 특성 측면에서는 기술인력 부족의 심화와 새로운 자재 개발과 활용이 포함됨. 시장 규칙과 제도에는 안전과 건설 현장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증가와 모듈러와 같은 새로운 건설 방식 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증가 및 관련 제도 도입이 포함됨.
 - 생산성 제고와 규격화를 가능하게 하는 모듈러 방식, 자동차 산업과 같은 공장 제작 방식의 탈현장화, 현장에서의 자동화 비중 확대 등 시설물의 구성 요소를 제조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형태의 산업화가 촉진될 것임.
 - 경량화되고 내구성이 높아진 새로운 자재의 개발은 공사비의 절감, 장거리 물류 가능, 생산과 조달의 집중화를 유인할 것임.
 - IoT 기반의 스마트 빌딩 및 인프라, BIM과 같은 디지털 설계 기술 활용,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기술 등으로 인해 건설 상품과 생산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될 것임.
 - 비건설 분야의 기업 진출 확대, 벤처 캐피탈 및 사모 펀드 등의 자금 조달이 가능한 스타트업의 등장은 기존 건설 사업모델의 변화를 촉진할 것임.

8) McKinsey(2020), 「The next normal in construction : How disruption is reshaping the world's largest ecosystem」.

■ 미래 건설산업의 혁신 형태는 상품기반의 접근, 전문화, 통합화, 인력투자 등 8개 영역에서

- 미래 건설산업은 상술한 다양한 혁신 동인의 영향으로 현재와는 다른 형태의 산업 생태계와 특성을 가지게 될 것임.
 - 상품기반의 접근(product-based approach) : 시설물의 많은 부문이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건설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주문 제작 및 규격화된 구성물과 프로세스를 통해 건설될 것임. 통제된 환경에서 사전 제작된 구성물의 조립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요소에 대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차별화된 설계 역량과 사전 제작이 가능한 설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질 것임.
 - 전문화(specialization) : 이익률 제고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품(주택, 오피스, 공장 등)별로 전문화된 기업 또는 동일 상품 안에서도 고급 주택, 일반 주택 등으로 세분화된 상품기반의 전문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등장할 것임.
 - 산업 조달 체계 기반의 가치사슬 관리와 통합(value chain control and integration with industrial-grade supply chain) : 기업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제조, 공급조달 관리, 현장 조립 등의 주요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게 됨. 이를 위해 전략적 제휴 또는 수직 통합,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이 활용될 것임.
 - 통합화(consolidation) : 상품기반의 접근 방식 전환은 규격화 및 반복성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쟁력이 동반되어야 함. 때문에, 가치사슬 안에서 기업 간 통합의 요구가 증가할 것임.
 - 고객 중심 및 브랜딩(customer centricity and branding) :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건설기업은 브랜딩 전략을 확대할 것임.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은 제공되는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술 및 설비 투자(investment in technology and facility) : 탈현장화에 필요한 공장 설비 투자와 생산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급증할 것임. 이에 따라 관련 R&D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관련 투자 규모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임.
 - 인력 투자(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 디지털화, 가치사슬 관리, 기술 활용 등은 기업의 전문가 보유에 따라 완성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임. 필요 인력에 대한 선제 채용과 교육 훈련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임.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기후 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한 규제 증가로 인해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요인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임.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정책,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경제 정책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고, 거의 모든 경제 대책에 빠짐없이 일자리 대책이 포함됐다. 각 정부 부처도 이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증대했다. 이런 결과로, 2017년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히 취업률은 높지 않지만 상승해왔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개선된 면이 있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의 객관적인 평가에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난 3~4월 취업자 수 100만명 감소를 예외로 하더라도 청년실업자 및 취업 포기율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 또한, 장기 실업자의 증가,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의 감소 등 여전히 일자리 정책의 효과는 미흡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최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난 지원금의 효과로 민간 소비가 다소 개선된 반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20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3.2% 하락했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더해 긴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고용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5~6월 취업자 수가 다소 증가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은 또다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그나마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던 건설업의 취업자 수마저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19 재확산 조짐이 지속되고,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이어진다면, 일자리 여건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일자

리 창출 방안들을 답습하는 선에서는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그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먼저, 지금까지의 일자리 창출 방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실제 고용시장과는 동떨어진 아이디어 수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나 경제 상황과는 거리가 먼 일자리 대책으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고용의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양적으로 늘어놓기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시기와 대상의 문제다. 최근 경제 상황은 시급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필요로 한다. 긴급재난 시기에 맞는 ‘긴급재난 일자리 창출대책’, 즉 긴급재난 고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2020년 상반기 가장 심각한 일자리 손실은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에서 나타났다. 이는 노동의 유연성은 제한된 가운데, 기업의 경제적 활동은 위축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결국,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활동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지금의 우리나라 고용 상황은 일자리에 빨간색 긴급 경보가 울린 상태다. 그러나 일자리 상황판만 보고 있을 순 없다. 일자리 상황판에 나타나지 않는 일자리 부족 문제가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계절 변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압박도 커질 시기가 됐다. 지금 우리 고용시장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이며,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2020.9.8>

김영덕(선임연구위원 · ydkim@cerik.re.kr)